

국립생태원 내륙습지 정밀조사 연구사업

순천 장박골습지·광양 합강습지 선정

내달부터 생태·수문·지형·식생 등 과학적 진단
“생태적 중요 습지 지속 발굴·추가 지정 등 총력”

전남도는 국립생태원의 ‘내륙습지 정밀 조사 연구사업’에 순천 조계산 장박골습지와 광양 합강습지가 선정돼 오는 3월 정밀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순천 장박골, 순천 동천하구, 광양 합강, 광양 세풍, 곡성 제월습지, 5개소를 정밀조사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립생태원은 12월까지 기초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순천 장박골습지와 광양 합강습지를 선정했다.

정밀조사는 국립생태원이 습지 전문가

를 선정해 착수할 예정이며, 습지의 생태·수문·지형·식생 등을 종합해 보전 필요성과 관리 방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천 조계산 장박골습지는 해발 약 750m에 위치한 산지형 고산습지로, 서어나무 등 다양한 식물군락이 형성됐다. 수달, 삥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광양합강습지는 동천·서천·역만천·인덕천, 4개 하천이 합류해 광양만으로 연

결되는 기수역 습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2급 7종이 확인되는 등 보전 가치가 높고 주변 개발·오염 우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있다.

정영균 전남도의회이 지난 2024년 제38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장박골 습지가 조계산 정상부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고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크다”고 강조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리 필요성을 지속해 제기하고 노력한 것도 이번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정부의 국가보호지역 확대 목표(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현재 전남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5개소와 해양수산부 지정 6개소를 포함해 총 11개소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관할 습지의 보전·관리 필요성을 조사·분석해 ‘전라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배성진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국립생태원, 시군, 습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정밀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정부의 국가보호지역 확대 정책과 연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속해서 발굴,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 전남·광주 대통합 포럼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전남·광주 대통합 포럼’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강대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양부남 국회의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 조계원·박균택 국회의원, 사진제공=광주시

도,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권익 강화 비수도권 최초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선정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선정돼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1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사업 참여를 준비한 결과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남도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법

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금융거래, 통장개설, 수술 등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시·군에서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와 아동 간 연계 여부를 결

정한다.

연계가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되며,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은 법원 후견 개시 확정일로부터 후견 종료 시까지 후견인의 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 결정 공론화 기구 구성을”

신정훈, 시·도지사에 제안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이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소제지 결정을 위한 중립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이면 시작될 통합특별시의 힘찬 출발을 위해 시청사의 주소제지 결정을 당선될 통합시장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청사의 주소제지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참여하는 중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대안에 대해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제도적 성과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통합특별시 권한 배분과 분권 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정수 산정 기준 반영, 통합특별시 권한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제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이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시 지역에서 통합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자치구 보통교부세 교부 방안을 검토토록 하는 부대 의견 확보도 성과로 꼽았다.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인공지능(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 모델을 제도화하고, 도농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와 무안공항 연계 항공네트워크 구축 근거가 반영된 점을 지역 현안을 고려한 정치적 성과로 꼽았다.

재정 특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해 통합특별시 안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며 향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를 빛낸 ‘최고의 시민’ 찾는다 시, 제39회 시민대상 후보자 23일부터 공모

광주시가 지역발전엔 헌신하고 명예를 드높인 ‘최고의 시민’을 찾는다.

시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제39회 광주시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광주시 시민대상은 1987년 제정돼 올해로 39회를 맞는 광주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그동안 사회봉사·학술·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5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으나 지난해부터 부문을 통합해 ‘최고의 시민’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는 시민대상의 권위와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후보 자격은 공고일(2월 20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발전과 시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시민(또는 단체)이다.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내

외 활동을 통해 광주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접수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광주시 자치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unnyyong5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자료 등이며, 관련 서식은 광주시 누리집(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증과 현장 확인을 거쳐 공적 사실을 엄격히 심사하고, 4월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5월 23일 열리는 ‘제61회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www.global-dh.com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DH 글로벌